

문재인정부 2년 반,

#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
---

더 분발하겠습니다!

---

2019년 11월



대한민국정부



문재인정부 2년 반,

# 이렇게 달라졌습니다

---

더 분발하겠습니다!

---

2019년 11월





## 우리 경제의 객관적 성과

- 1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.
- 2 공정한 경제질서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.



## 혁신성장

- 1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.
- 2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- 3 우리 경제가 맘껏 뿔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
- 4 국가 기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본 수출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- 5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- 6 노동시간을 줄이고, 임금격차는 완화했습니다.



## 포용적 복지

- 1 체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
- 2 국민의 병원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.
- 3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했습니다.
- 4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교육 신뢰는 높이겠습니다.
- 5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.
- 6 취약계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- 7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.



## 안전한 대한민국

- 1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.
- 2 전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- 3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.
- 4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
- 5 재외국민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- 6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.



## 평화의 한반도

- 1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- 2 남북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.
- 3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- 4 당당한 외교, 흔들림 없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5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

## 지역균형발전

- 1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
- 2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.
- 3 지방분권, 가속화하겠습니다.



## 민주주의

- 1 민주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--

# 우리 경제의 객관적 성과

---



# 1.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.

## 3만 달러

1인당 국민소득  
('18년 기준)

## 세계 7번째

30-50클럽  
(소득 3만 달러·인구 5천만)

## 1위

거시경제안정성·ICT보급부문 2년 연속  
('19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결과)

###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.('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33,434달러)

-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('18년 GDP 기준IMF), 수출규모 세계 6위 · 3년 연속 무역 1조불 달성 전망
- 세계 7번째, 식민지 벗어난 국가 최초로 30-50클럽 가입(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, 인구 5천만명 이상)

### 전 세계적 경기둔화 상황 속에서 우리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세계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하여 양호  
\* 연간 기준 경제수준·규모가 유사한 30-50클럽 중 2위(OECD·IMF, '19년 경제전망)



-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우리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과 미래성장동력을 발굴  
\* 우리나라 '17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40.1%로 OECD 중 4위(OECD 평균:110.5%)  
\* IMF 총재, 세계 경제둔화에 대응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강조 / '한국의 재정책대는 다른 나라들의 모델'이라고 평가(FT지, '19.9월)

### 국제사회는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을 매우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

- '19년 국가경쟁력평가결과(WEF), '17년 17위에서 '18년 15위, 금년은 13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  
- '거시경제 안정성' · 'ICT보급부문' 2년 연속 1위, '혁신역량'도 2단계 상승한 6위
- '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결과,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 5위 기록  
- '14년 이후 6년 연속 Top5 달성, G20국가 중 1위, OECD국가 중 3위  
\* 우리나라 순위 : ('10)16위 ('11)8위 ('12)8위 ('13)7위 ('14)5위 ('15)4위 ('16)5위 ('17)4위 ('18)5위 ('19)5위  
\* 주요국 순위 : 뉴질랜드 1위, 싱가포르 2위, 홍콩 3위, 덴마크 4위, 미국 6위, 영국 8위 등
-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금리로 15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 성공('19.6월),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유지(AA등급 S&P), 국가부도위험 나타내는 '신용부도스와프(CDS) 프리미엄'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
\* '19년 11월 5일 기준 한국 CDS 프리미엄 27bp(1bp=0.01%)로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

## 2. 공정한 경제질서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.

**90% 이상**

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

**107조원**

연간 상생결제액('18년)

**1조 741억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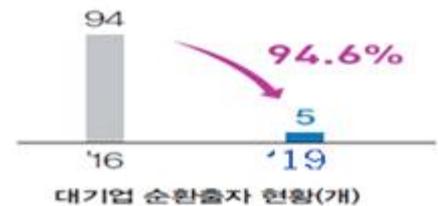
상생협력기금 조성('19.9월 누적)

### 하도급·가맹·유통·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.

-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·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,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  
(「하도급법」 개정, '18.1월, 4월)
  - \* 「하도급법」 상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,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개시 시효 연장(3→7년)
-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(가맹법 개정, '18.10월)
-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,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·확대
  - \* 「하도급법」 개정('18.1월), 「가맹법」 개정('18.1월), 「유통업법」 개정('18.10월)

###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습니다.

-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% 이상 해소
  - \*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: ('16년) 94개 → ('19년) 5개
-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엄중 제재
  - \* '18년 과징금 401억원 부과, 법인 6개, 개인 12명 고발
- 정보공개, 재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
  - \* 지배구조 개편 현황: 현대자동차('19.1월), SK('19.3월), 포스코('19.1월), 한진('19.5월), CJ('19.3월) 등
-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'스튜어드십 코드' 도입
  - \*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: ('17년) 12.9% → ('18년) 18.8% → ('19.1분기) 20.4%



### 대-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-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,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참여·상생협력기금 조성
  - \*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6개 대기업 참여('19.10월),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741억원 조성('19.9월 누적)
- '18년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원 돌파('18년, 107조원)
  - \* 연도별 상생결제 현황 : ('16년) 66.7조원 → ('17년) 93.6조원 → ('18년) 107조원

---

# 혁신성장

---



## 1. 미래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.

**5G**

'19.4월, 세계 최초 상용화

**+229%**

시스템반도체 관련 예산  
( '19년 대비 '20년 정부안)

**40배, 7배**

수소차, 전기차 보급 확대  
( '16년 대비 '19년)

###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했습니다.

- 스마트폰 기반의 세계 최초 5G 상용화('19.4월) 및 우리 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개시
- \* 5G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, 5G 장비 세계시장 점유율 2위 / 국내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와 5G 기술(네트워크 설계, 안테나 등) 수출 계약 체결('19.10월)

###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(DNA: Data-Network-AI)을 구축하였습니다.

- (D 데이터)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 15조원 돌파('17년 대비 5.6%↑), '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성장 추진
- (N 네트워크)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5G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5G+ 전략 수립추진('19.4월)
- (A 인공지능) AI 전문기업 수 증가('16년 27개 → '18년 45개),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(~23년)
- \* 미국과의 기술격차 : ('16년) 2.4년 → ('18년) 1.8년(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)
- ※ 유니콘기업 :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

### 2년 연속 ICT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.

-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, 인터넷 사용자 수 등에서 최상위권을 유지(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, '19.10월)

### 3대 전략투자 · 8대 선도사업 추진으로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- (3대 전략투자) 데이터산업 확대, AI 전문기업 증가, 수소차·충전소 보급 확대 등
- \* 빅데이터 산업 규모: ('17년) 4,547억원 → ('18년) 5,843억원 / 수소차 누적 3,436대 보급('19.9월) / 수소충전소 누적 31기 구축('19.10월)
- (8대 선도사업) 스마트팜스마트공장 등 생산성 향상, 바이오 분야 신약 개발기술 수출 증가 등
- \* 스마트팜(생산성 30.0%↑, 불량률 43.5%↓, 원가 15.9%↓), 스마트공장(생산성 31%↑, 고품질 생산 39%↑) 신약 개발('17년 29건→'18년 30건), 신약 기술수출 확대('17년 1.4조원 → '18년 5.3조원)

##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습니다.

-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(의장 국무총리)를 복원하여 분야별 21개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등 범부처 연계·조정 기능 강화('19년 총 7회 개최)
  - \* '국가 R&D 혁신·도전성 강화방안'(19.5월), '소재·부품·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 대책'(19.8월) 등

## 과감하고 도전적인 R&D 투자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- 정부 R&D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.5조원('19년)을 돌파했으며 내년에는 17.3% 확대 (24.1조원, 정부안 기준)
  - \* 중점 투자분야('19년) : 시스템반도체-미래형자동차-바이오헬스(3대 중점산업) 1.3조원, 데이터-네트워크-인공지능(DNA) 0.7조원, 소재·부품·장비 원천기술 1,600억원('20년 3,000억원 예정, '20~'22년 5조원 이상 투자) 등
  - \* 연구자주도 기초연구비 지원 : ('16년) 1.1조원 → ('19년) 1.7조원

##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여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한 도약의 초석을 놓았습니다.

-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('21년~), 설계전공트랙\* 출범('19.6월~, 연 200명)
  - \* 군산대, 금오공대, 서경대, 울산과기원, 이화여대, 충북대 등 13개 대학
- 시스템반도체 관련 '20년 사업 예산 2,300억원 반영(정부안, '19년 대비 +229%)
  - \*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891억원, 핵심IP개발 90억원, 나노패고도화 165억원, 설계지원센터 60억원 등
- 시스템반도체 설계·제조 기술개발 등의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('20년~)

## 세계 친환경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, 미래자동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- 전기차·수소차 보급 확대, 세계 최초 국회 수소충전소 준공 등 기반 구축
  - \* 보급실적(누적): 수소차 ('16년) 87대 → ('19.9월) 3,436대, 전기차 ('16년) 10,855대 → ('19.9월) 80,902대
  - \* 수소충전소(누적) : ('17년) 10개소 → ('18년) 14개소 → ('19.10월) 31개소

##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

- 바이오헬스 분야 상품 및 기술 수출액의 지속적인 증가
  - \* 바이오헬스 상품 수출액 : ('16년) 60.4억불 → ('17년) 72.3억불 → ('18년) 82.8억불
  - \* 바이오헬스 기술 수출액 : ('17년) 12억 3,400만불 → ('18년) 41억 8,765만불

## 2. 창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

### 4조원

벤처투자 역대 최고  
3조원 달성('18년)  
4조원 예상('19년)

### 10만개

신설법인 2년 연속  
10만개 돌파 전망

### 9개

유니콘기업 1년만에  
3개 → 9개 최대 증가

### 벤처투자 · 신설법인 · 유니콘기업을 사상 최대로 성장시켰습니다.

- '19년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.4조원을 넘어 4조원 전망, 신설법인수 역대최고치 10만개 돌파
  - \* 벤처투자(조원) : ('15년) 2.1 → ('16년) 2.2 → ('17년) 2.4 → ('18년) 3.4 → ('19.9월) 3.1 → ('19년) 4조원 예상
  - \* 신설법인(만개) : ('03년) 5.3 → ('08년) 5.1 → ('13년) 7.6 → ('18년) 10.2 → ('19.8월) 7.3 (전년동기대비 4.3%↑)
  - \* 벤처기업(천개) : ('00년) 9 → ('05년) 10 → ('10년) 25 → ('15년) 31 → ('19.8월) 37
- 유니콘기업(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) 1년만에 3개사('18.7월)에서 9개사('19.6월)로 증가, 미국 · 중국 · 영국 등에 이어 국가별 유니콘 순위 6위 차지
  - \* 유니콘기업('19.9월, CBinsights) : 미국(195), 중국(99), 영국(21), 인도(19), 독일(11), 한국(9)

###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 혁신을 위해 벤처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습니다.

- '중소기업청'을 '중소벤처기업부'로 확대 신설('17.7월)
- 혁신성 ·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과 확인을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

###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.

- 창업-성장-재도전기에 있는 창업기업(2만개)에게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4.2조원 지원
  - \* '19년 정책자금 : (본예산) 36,700억원 → (추경, 8월) 42,280억원(5,580억원↑)
- '22년까지 스케일업 펀드 12조원 조성('19년 2.5조원) 통해 유망창업기업 도약지원

### 실패부담완화를 위해 재도전 걸림돌을 제거하겠습니다.

-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(면제)하고,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 정리
  - \* 연대보증 면제 실적 : ('17년) 2.9조원 → ('18년) 17.3조원 → ('19.8월) 16.9조원 → ('19년) 23.5조원(추정)
  - \* 부실채권 정리 : 1.4조원 → ('19년) 1.2조원(추정) → ('22년까지) 3.3조원

### 청년 벤처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하겠습니다.

- 정부·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·서비스 구매 확산
  - \*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 : ('18년) 60개 → ('19.9월) 361개 (6.0배↑)
  - \*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: ('18년) 268억원 → ('19.1~8월) 857억원 (3.2배↑)

### 3. 우리 경제가 맘껏 뿔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.

# 4+1

규제 샌드박스 4법  
행정규제기본법 시행

# 141건

규제 샌드박스 승인

# 3,600여건

규제개선 방안 확정

### 우선 허용하고, 사후 규제하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.

#### •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

- 실물경제 포함 4대 분야(ICT·산업융합·금융혁신·지역특구)를 포괄, 신속확인·임시허가·실증특례 3종 세트 등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운영
- \*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시행 9개월만에 141건(ICT 32, 산업융합 33, 금융혁신 53, 지역특구 23) 승인('19.9월말 기준)
- ※ (영국) 연 평균 40여건, (일본) '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

#### < 주요 사례 >

<p><b>☑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됩니다</b></p> <p>▶ 용도지역 제한,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 애로</p> <p>▶ 국회 등 4곳에 설치</p>  <p><small>* '19년 9월 국회 수소충전소 개소</small></p>	<p><b>☑ 택시동승의 새로운 시도를 허용합니다</b></p> <p>▶ 택시의 합승운행 금지</p> <p>▶ 앱기반의 자발적 택시동승(1+1) 중개 서비스에 한해 허용 (6개 권역에 限)</p>  <p><small>* '19년 8월 시행</small></p>	<p><b>☑ 공유주방 서비스가 시작됩니다</b></p> <p>▶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제한</p> <p>▶ 온라인 기반의 주방·관련시설 대여·공유 서비스 및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 B2B 판매 허용</p>  <p><small>* '19년 8월 시행</small></p>
--	---	--

- 7개 시·도 규제자유특구 지정\*(19.7월), 8개 시·도 추가 심사 중

\* 강원(디지털 헬스케어), 대구(스마트 웰니스), 전남(e모빌리티), 충북(스마트 안전제어), 경북(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), 부산(블록체인), 세종(자율주행)

#### • 테마별 일괄정비(Top-down)

-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예측에 기반해 선제적 규제이슈 발굴 및 정비

\* 자율자동차('18.11월) 및 드론('19.10월)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

- 입법방식 유연화 등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(4차례, 377건)

#### < 주요 사례 >

<p><b>&lt; 산업단지 입주 업종 네거티브존 도입 &gt;</b></p> <p><b>기 준</b> 산업단지 내, 모든 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 불가 예) 드론 제조업(○), 항공촬영 등 연계 서비스업(×)</p> <p><b>개 선</b> 다양한 융복합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존 도입</p>  <p>[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(연내)]</p>	<p><b>&lt; 신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 허용 &gt;</b></p> <p><b>기 준</b>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소방경보시설은 '유선방식 설비'만 가능</p> <p><b>개 선</b> IoT기반 무선 화재알림 설비도 허용</p>  <p>[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예정(연내)]</p>
--	--

• **현장 건의에 따른 규제개선 지속 추진(Bottom-up)**

- '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'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,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(4차례, 240건)
- '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' 중심 중기·벤처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(324건)
-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'규제개혁신문고' 상시 운영(486건)

< 주요 사례 >

< 입국장 면세점 도입 >	< 혈액암 소아환자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>
세관 및 검역 통제기능 약화 우려 등으로 도입 유보 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 내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개설('19.5월)	투약용량 등 안전성 우려로 12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성인용 신약 사용 금지 ⇨ 중증 소아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안정성 검토를 거쳐 성인용 신약 사용 승인('19.7월)

**규제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고,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있습니다.**

- 국민·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개선
- \* 부처 수용근란·중장기검토 건의과제(375건) 및 행정규칙 상 규제(642건) 등 총 1,017건 개선('19.3~6월)

**규제 정책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있습니다.**

- '적극행정 추진방안\*'('19.3월) 마련,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) 제정('19.8월)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 완료
- \* △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마련 △사전컨설팅 면책 확산('19년 감사원 도입 → 하반기, 중앙부처도 시행) △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·운영('19.3월~) 등

**소통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**

-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(4회), 지자체 현장간담회(8회), 협회·단체 릴레이 간담회(74개소) 등 실시
- \* 현장건의 과제 162건, 지자체 건의 80건 등 개선

#### 4. 국가 기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본 수출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.

## 세계 1위

메모리반도체  
세계시장 점유율('18년)

## 세계 1위

조선업 수주액 ('19.1~9월)

## 295%

스마트공장 확대  
(16년 대비 19년 증가율)

####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

- 120조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지원
  - \* 산단 부지 및 물량 추가 공급 확정('19.3월) 이후 지정계획 고시('19.6월, 경기도) 등
-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충
  - \*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합의안 도출 등을 통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 전력 확보

#### 조선업은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, 미래 친환경 시대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

- '18년 조선 수주 7년만에 세계 1위 탈환, '19.1~9월 누적 수주액 세계 1위(126.7억불)  
LNG운반선, VLCC 등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 경쟁우위 지속
  - \* LNG운반선 31척 중 28척(90%), VLCC 22척 중 12척(55%) 수주
  - \* 「환경친화적선박법」 제정('18.12월), 관공선 친환경선 의무화, 친환경선박 및 벙커링 지원 등 기반마련

####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민간·정부의 위기극복 노력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이 반등\*하고 있으며, 민간투자(60조원)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가속화 지원
  - \* 전년동기 대비 '19.1~9월 생산 0.5%↑, 수출 1.2%↑
- 부품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유동성 2조원 이상 추가 지원(3년간, 기존 3.5조원 → 5.5조원 이상)
  - \* 한국 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부품업체에 대해 정책금융 만기연장 지원(2조원 이상)

####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산업단지도 스마트하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.

- 스마트 선도산단 지정('19.2월 창원/반월시화, 9월 구미/남동)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
  - \* 스마트공장보급 : ('16년) 2,800개 → ('17년) 5,003개 → ('18년) 7,903개 → ('19.9월) 11,060개

#### 민·관이 합심하여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있습니다.

-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\*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원스톱 해결 지원('19.7월)
  - \* '19.10월말 기준 총 1,085건의 자금애로 신청 중 긴급경영안정자금 867억원, 만기연장·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2조 3,625억원 등 지원
- 핵심 소재·부품에 대한 국내 투자 확대 및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, 합작법인 설립 추진
  - \* 탄소섬유 공장 증설(~'28년, 1조원 투자), 친환경차 부품 공장 신설(~'21년, 3천억원 투자)
  - \* SK 실트론(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), 현대차(미국 애플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)
- 일본 수출규제 대응 '소재·부품·장비 R&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(안)' 마련('19.8월)
  - \* 핵심품목(100+α) 긴급 진단(~'19년)을 통한 R&D 대응전략 마련, '20~'22년 동안 5조원 이상 투자 등
- 수요·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(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 강화대책, '19.8월)

## 5.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
**67.1%**

고용률('19.9월)

**43.7%**

청년 고용률('19.9월)

**69.8%**

상용근로자 비중('19.9월)

###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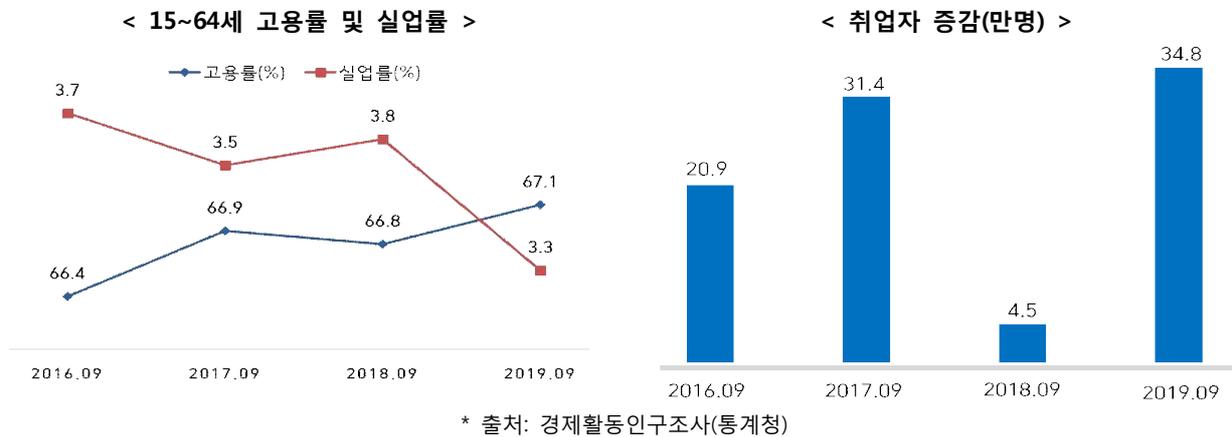
- 고용률은 67.1%로 전년동월대비 +0.3%p 상승, 취업자 수는 34.8만명 증가('19.9월)

\* 고용률(15~64세, %) : ('16.9월) 66.4 → ('17.9월) 66.9 → ('18.9월) 66.8 → ('19.9월) 67.1

\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 : ('16.9월) 20.9 → ('17.9월) 31.4 → ('18.9월) 4.5 → ('19.9월) 34.8

- 실업률은 3.3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하락('19.9월)

\* 실업률(15~64세, %) : ('16.9월) 3.7 → ('17.9월) 3.5 → ('18.9월) 3.8 → ('19.9월) 3.3



### 청년·여성·고령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청년 고용률은 43.7%로 전년동월대비 0.8%p 상승하고, 실업률은 하락('19.9월)

\* 청년 고용률(15~29세, %) : ('16.9월) 41.9 → ('17.9월) 42.2 → ('18.9월) 42.9 → ('19.9월) 43.7

\* 청년 실업률(15~29세, %) : ('16.9월) 9.4 → ('17.9월) 9.2 → ('18.9월) 8.8 → ('19.9월) 7.3

- 여성 고용률은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증가세 지속

\* 여성 고용률(15~64세, %) : ('16.9월) 56.5 → ('17.9월) 57.3 → ('18.9월) 57.5 → ('19.9월) 58.3

\* 여성 경제활동참가율(15~64세, %) : ('16.9월) 58.6 → ('17.9월) 59.2 → ('18.9월) 59.7 → ('19.9월) 60.1

- 65세 이상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

\* 65세 이상 고용률(%) : ('16.9월) 32.6 → ('17.9월) 32.8 → ('18.9월) 33.4 → ('19.9월) 3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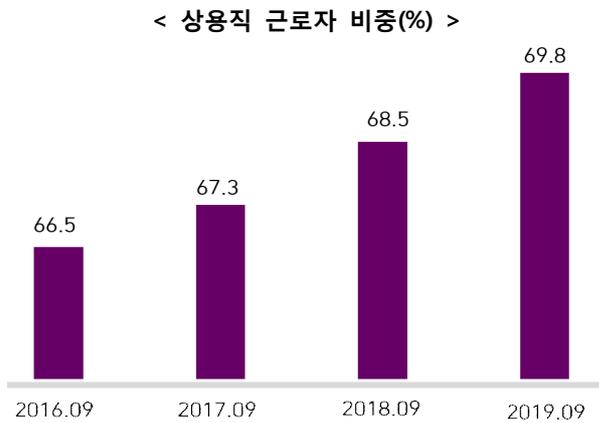
##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.

-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근로자 비중 지속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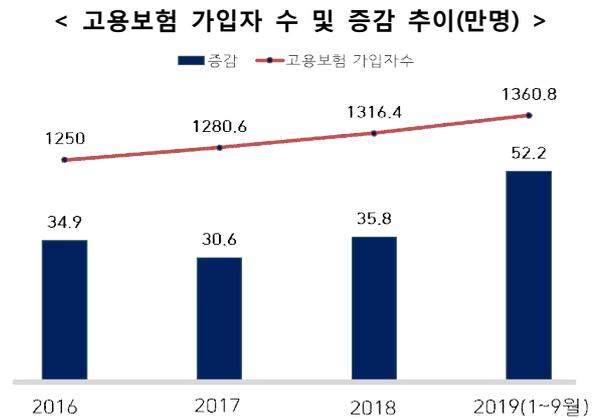
\* 상용근로자 비중(%) : ('16.9월) 66.5 → ('17.9월) 67.3 → ('18.9월) 68.5 → ('19.9월) 69.8

-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지속 증가

\* 고용보험 가입자수(만명) : ('16년) 1,250.0 → ('17년) 1,280.6 → ('18년) 1,316.4 → ('19.1~9월) 1,360.8



\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(통계청)



\* 출처: 고용보험 DB(고용노동부)

## 근로장려금(EITC)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.

- 일하는 서민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(EITC) 지원요건 완화, 지원대상이 대폭 증가('17년 166만 → '19년 334만 가구)

\* 연령요건 : 30세 이상 → 폐지, 재산기준 : 1.4억원 미만 → 2.0억원 미만

소득요건 : (단독)1,300 → 2,000만원, (홀벌이) 2,100 → 3,000만원, (맞벌이) 2,500 → 3,600만원

## 6. 노동시간을 줄이고, 임금격차는 완화했습니다.

# 1,986시간

연간 노동시간('18년)

# 8,350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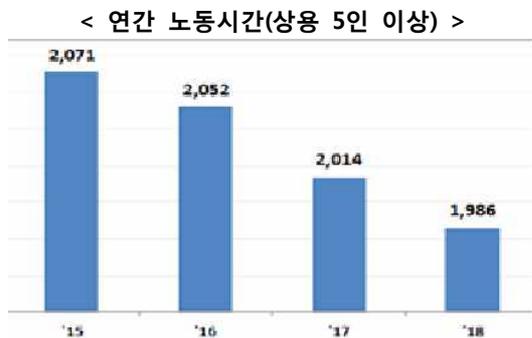
최저임금('19년)

# 16만 1천명

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 
('19.6월 기준)

###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였습니다.

-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·업종별로 단계적 단축
  - \* 300인 이상 사업장 : '18.7월(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'19.7월부터 적용)
  - 50~300인미만 사업장 : '20.1월, 5~50인미만 사업장 : '21.7월
-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
  - \*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 지원(108억원), 전문가 컨설팅 지원(650개소), 공공조달 우대 등



\* 출처: 사업체 노동력 조사(노동부)



\* 출처: 경제활동인구조사(통계청)

###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.

-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으로 노동자의 임금분배구조 개선
  - \* 최저임금(원) : ('18년) 7,530 → ('19년) 8,350 → ('20년) 8,590
  - \* 저임금노동자 비중(%) : ('16.6월) 23.5 → ('17.6월) 22.3 → ('18.6월) 19.0
  - \* 임금 5분위 배율(배) : ('16.6월) 5.24 → ('17.6월) 5.06 → ('18.6월) 4.67



\* 출처: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(18.6월, 고용노동부)

- '일자리 안정자금' 신설,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
  - \*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실적('18년) : 총 65만개 사업장, 264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,136억원 지원
-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('19.1월) 및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추진
  - \*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, 복리후생비 등 산입(「최저임금법」 개정, '18.6월)
  - \*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,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 부여 등 추진

## **공공부문 비정규직 16만 1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.**

-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('17.7~'20.12월)
  - \* (1단계: 중앙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 전환 15.7만명 → (2단계: 지자체 출연기관 등) 전환 약 3,800명 → (3단계: 민간위탁기관) 정책방향 발표('19.2월)
-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
  - \* 식비·복지포인트·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 우선 지급(월 20만원 이상 임금 인상 효과) 등

## **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.**

-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「근로기준법」 개정('19.7월 시행)
  - \*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,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, 행위자 징계,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사항 등
- 직장 내 괴롭힘으로 '사회적 물의'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

---

# 포용적 복지

---



## 1. 체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

**256개소**

치매안심센터 설치

**최대 30만원**

기초·장애인연금 지급

**48만명**

기초수급자 신규 보호

###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, 상담·검진·1: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
-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(본인부담률 10%로 인하, '17.10월), 치매 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(신경인지검사 '17.10월, MRI 검사 '18.1월)
-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'인지지원등급' 신설('18.1월)
-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('20~'28년, 1,987억원 투입)
  - \*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,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,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

### 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.

-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('18.9월), 소득 하위 20% 어르신 월 최대 30만원 지급('19.4월)
- 노인일자리 지속 확충\*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('19년, 월 60시간/59만원, 2만개)
  - \* ('18년) 51만개 → ('19년) 64만개 → ('22년) 80만개 목표

### 장애인의 생활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.

- 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('18.9월), 생계·의료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('19.4월)
-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\* 시행('19.7월~),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 지원 탈피, 장애인 욕구·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
  - \* ('19.7월) 복지·보건 분야 → ('20년) 주거·이동 지원 분야 → ('22년) 소득·고용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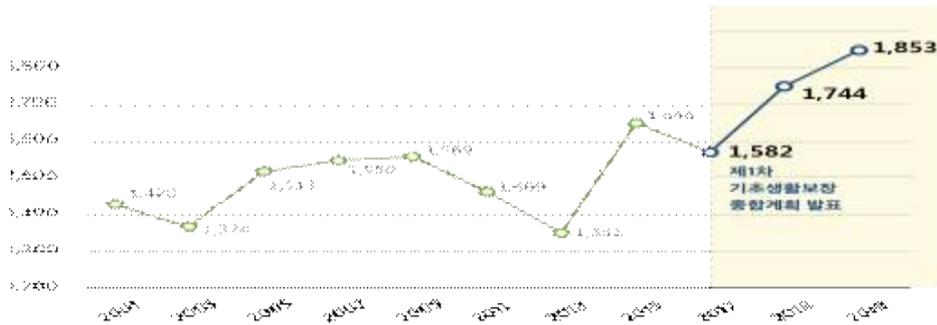
##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초음파·MRI 건강보험 적용,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\* 부담 해소 등으로 2.2조원 경감('18.1월~'19.4월)
  - \* 선택진료비 폐지,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,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

##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\*를 통해 최대 48만명 신규 지원('19.8월)
  - \* 1단계('17.11월) :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
  - 2단계('18.10월) :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  - 3단계('19.1월) :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%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(생계·의료급여) 등

※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 추이(단위 : 천명)



## 2. 국민의 병원비를 크게 낮추었습니다.

### 2.2조원

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 
('18.1~'19.4월)

### 1/2~1/4

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

### 6만원

상복부 초음파 비용 절감

###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초음파(상복부 '18.4월, 하복부·비뇨기 '19.2월), MRI(뇌·뇌혈관 '18.10월, 두경부 '19.5월) 등 건강보험 적용
  -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('18.1월), 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 2·3인실 건강보험 적용('18.7월),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확대\* 등 추진
    - \* 4.2만개 병상 참여 중('19.8월 말 기준/누적), '22년까지 10만 병상까지 확대 예정
  -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대책 시행 전 대비 1/2~1/4 수준으로 경감,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\* 68.8%('18년, 상급종합병원 기준)로 지속 상승 중
    - \* ('16년) 63.4% → ('17년) 65.6% → ('18년) 68.8%(잠정)
- 국민 의료비 부담 2.2조원 경감('18.1~'19.4월)

### 국민이 누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



###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.

- 노인 :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('17.11월) 및 치과 임플란트('18.7월) 본인부담률 인하(50→30%)
  - \*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 평균 65→ 39만원(1약당), 임플란트 환자 의료비 부담 62→ 37만원(1개당)
- 아동 :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(10~20%→5%, '17.10월),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(본인부담 평균 10만원→2.5만원, '19.1월),
- 여성 :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(본인부담 30%, '17.10월), 지원 횟수 확대(신선배아 4→7회 등) 및 연령 제한 폐지('19.7월)

###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재난적 의료비 지원\* 제도화 및 대상 확대(소득하위 50%, 모든 질환)('18.7월)
  - \*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(항암·희귀난치질환 등)를 소득에 따라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

### 3.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했습니다.

10만원

아동수당

1,486개소  
1,788학급

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 확충  
(‘17년~‘19년)

10일

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‘19.10월)

#### 아동수당,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.

- 만 7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
  - \* (‘18.9월) 소득·재산 하위 90% 만 6세 미만 아동 → (‘19.1월) 소득·재산 요건 폐지 → (‘19.9월) 만 7세 미만으로 확대

####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을 더 빨리 확충하겠습니다.

- 국공립 어린이집 총 1,486개소 확충(‘17~‘19.9월)
  - \* (‘17년) 373개소, (‘18년) 574개소, (‘19.9월) 539개소
- 국공립 유치원 총 1,788학급 확충(‘17~‘19.3월)
  - \* (‘17년) 585학급, (‘18년) 501학급, (‘19.3월) 702학급

####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
- (초등 돌봄교실)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
  - \* 돌봄교실 확충 : (‘17년) 11,980실 → (‘18년) 12,398실 → (‘19년) 13,910실
  - \* 돌봄교실 이용 학생 : (‘17년) 24.5만명 → (‘18년) 26.1만명 → (‘19년) 29만명
- (다함께 돌봄센터) 초등 방과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 확대(‘19.10월 105개소 운영)

#### 출산·육아기에 대한 부모 지원을 강화했습니다.

-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(‘18년 월 상한 200만원 → ‘19년 월 상한 250만원)
-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유급3일+무급2일 → 유급10일, ‘19.10월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(‘19.10월)

####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확대했습니다.

-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및 대상 연령 확대



#### 4. 국민의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교육 신뢰는 높이겠습니다.

**100%**

누리과정 국고지원

**100%**

1단계 에듀파인 도입 대상

**160만원**

고교무상교육 부담 경감(연간)

#### 누리과정(만 3~5세)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.

-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및 학비 지원
  - \* 어린이집 지원 : ('17년) 8,600억원(41.2%) → ('18년) 2조 586억원(100%) → ('19년) 1조 9,812억원(100%)
  - \* 유치원 지원 : ('17년) 1조 8,533억원(100%) → ('18년) 1조 8,341억원(100%) → ('19년) 1조 7,628억원(100%)

####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.

- 사립유치원 1,321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도입('19.3월)
  - \* 200명 이상 1단계 도입대상 568개원 100% 도입 완료, 도입희망 사립유치원 753개원 추가 도입
-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,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
-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'처음학교로' 의무화('20년~)

####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.

-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부담 경감
  - \* 도입일정 : ('19년 下) 고3년생, ('20년) 고2·3년생, ('21년) 전체 고교생 대상
  - \* 지원사항 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대금 등
-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
  - \*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개정('19.10월)

####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-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
  - \* ('18년) 국·공립대학 전면 폐지 → ('19~'21년) 사립대학 단계적 감축 → ('22년까지) 사립대학 완전 폐지
  - \*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(「고등교육법」 개정, '19.10월)
- 반값등록금(사립대학 평균 기준 50%, 368만원) 확대
  - \* ('17년) 52만명 → ('18년) 66.5만명 → ('19년) 68.9만명
-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
  - \* ('17년) 22,718명 → ('18년) 29,166명 → ('19.8월) 31,928명

####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
-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 지속 감축
  - \* ('18년) 19,473명, 5.5%, ('19년) 18,799명 5.4%, ('20년) 16,809명 4.8%, ('21년) 15,097명 4.3%
- 대입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예고제(4년전 공표), 입학사정관 회파배제 규정 신설('19.4월)
-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
  - \*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시 탈락입학취소, 평가기준 공개 확대, 대입공정성 관련 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등

## 5.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.

# 37만호

공공임대주택 공급

# 146만호

등록 민간 임대주택 확충

# 100만가구 13.4만원

주거급여 수급가구  
주거급여 지원금액

###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,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(30만호)

\*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: ('17년) 12.7만호 → ('19.9월) 37만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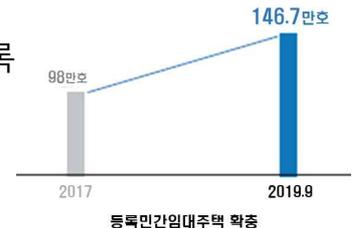
###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.

- 무주택자 우선추첨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,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

\* 민영주택 무주택자 당첨비율(서울) : ('17년) 74.2% → ('19년) 97.5%

- 임대료 인상 제한,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50% 증가

\* 등록 민간임대주택 : ('17년) 98만호 → ('19.9월) 146.7만호



###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**청년** : 청년우대형청약통장, 기숙사형 청년주택, 산단형 행복주택,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
- **신혼부부** : 신혼희망타운, 신혼 특별공급 2배 확대, 구입·전세자금 기준 확대
- **어르신** :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,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어르신 주거 지원 강화
- **저소득층** : 주거급여 수급가구 100만가구 이상 지원,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18.10월),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향상

\* 주거급여 : (수급가구) ('18.9월) 83만 가구 → ('18.12월) 95만 가구 → ('19.9월) 101.8만 가구  
(지원금액) ('17년) 11.7만원 → ('18년) 12.9만원 → ('19.9월) 13.4만원

## 6. 취약계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.

**4.3%**

가계부채 증가율 안정화  
(‘19.2분기 전년동기대비 비율)

**4.3조원**

생계형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 
채무 면제·감면

**316만명**

저소득층, 만65세 이상 어르신  
통신요금 감면 수혜자(‘19.8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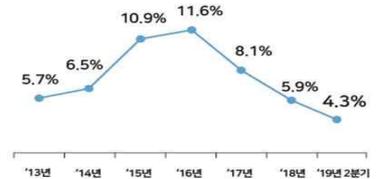
###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국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.

-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화

\* 가계부채 증가율(전년 대비, 한은):

(‘16년) 11.6% → (‘17년) 8.1% → (‘18년) 5.9% → (‘19.2분기) 4.3%

<가계부채 증가율 관리>



- 고정금리·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

\*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/분할상환 대출비중: (‘13년)15.9/18.7% → (‘16년) 43.0/45.1% → (‘19.1분기) 46.8/52.1%

###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.

- 공공·민간 부분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속적 소각

\* 소각 채권 현황(‘17~‘19.6월) : 365만명, 37.1조원 소각

-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

\* 채무조정 현황(‘17~‘19.6월) : 64.1만명, 4.3조원 면제·감면

금융채무불이행자 감소



-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: (‘17년) 94.2만명 → (‘19.6월) 89.8만명

###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전국48개)를 통해 원스톱서민금융지원서비스 제공

\*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실적(연간) : (‘17년) 90.5만건 → (‘18년) 97.7만건 → (‘19.6월) 53.8만건

- 서민을 위한 저금리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증대

\* 정책서민금융 공급액(연간) : (‘16년) 5조원 → (‘17년) 6.9조원 → (‘18년) 7.2조원 → (‘19.6월) 3.8조원

\* 서민금융 수혜자 수(연간) : (‘16년) 49만명 → (‘17년) 55만명 → (‘18년) 58.4만명 → (‘19.6월) 29.9만명

## 중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.

- 사잇돌 대출 지원조건 완화, 민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
- \*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 : ('16년) 1.3조원 → ('17년) 3.7조원 → ('18년) 6조원 → ('19.3월) 1.8조원

##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였습니다.

-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('17.7월)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('19.1월)
- \*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: ('17.7월) 84% → ('19.1월) 96%
- 온라인사업자, 개인택시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('19.1월)
- \* '19.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: 온라인사업자 57.5만명,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

##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.

-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,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(최대20%)하고, 알뜰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카드사 추가 할인혜택 제공(10%)
- \* '18년 세종·울산·전주 시범 도입, '19년 시범사업 11개 지자체를 시작('19.6월~)으로 확대 시행, 초기성과 분석 결과 이용자 월 평균 교통비 10,741원 절감, 직장인·20~30대·여성에게 높은 호응
- 서울외곽 등 6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('18.4월), 설·추석·동계올림픽 기간 전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행('17.10월)
- \* 서울외곽(33.3%↓), 서울춘천(16.2%↓), 수원광명(10.3%↓), 설·추석·동계올림픽기간(약 4억904만명 혜택)

##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.

- 단말기지원금 대신 받는 월 요금할인을 상향(20% → 25%, '17.9월)
- \* 연간 요금할인액 규모 : 1.49조원 → 3.07조원 (1.58조원↑)
-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11,000원 추가 요금감면('17.12월)
-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11,000원 요금감면 실시('18.7월)
- \* 요금감면 수혜자 수 : ('16.12월) 85만명 → ('19.8월) 316만명

## 7.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.

**1만 8,716명**  
**1,362억원**

독립유공자 후손  
생활지원금 지원

**10만 5,516명**

국가유공자 명패 제공

**647명**

독립유공자 포상  
(‘19.12월 잠정)

###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,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직기반 마련(‘17.7월)
-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(월 33~46만원) 지급(‘18.1월)
  - \* (‘18.1월) 3,007명 → (‘19.10월) 1만 8,716명으로 6배 이상 증가, 총 1,362억원 지원
-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(‘18.1월)
  - \* (종전) 대표 유족 1인 한정 → (변경) 영주귀국 유족 세대주 모두에게 지원
-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확대, 참전명예수당 인상
  - \* 진료비 : (‘16년) 60% 감면, 89,469명 288억원 수혜 (1인당 약32만원) → (‘18~‘19.6월) 90% 감면, 17만 2,341명 913억원 수혜 (1인당 약53만원)
  - \* 참전명예수당 : (‘16년) 월 20만원 → (‘17년) 월 22만원 → (‘18년) 월 30만원
- 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‘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’ 추진(‘18.11월)
  - \* 독립·호국·민주 국가유공자 10만 5,516명에게 증정(‘19.9월)
- 국가유공자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방문하여 증정
  - \* 「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」 제정(‘18.6월) 이후 1만 7,920명 지원
- 괴산호국원 개원(‘19.10월), 임실호국원 확충(‘17.7월)으로 안장수요 증가 대비 및 접근 편의 제공
  - \* 괴산호국원 : 2만 447기(봉안당 1만 9,368기, 잔디장 1,079기), 임실호국원 : 1만 2,240기(봉안당)



###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
  - \* (포상인원) '16년 312명(여성 14명) → '17년 269명(여성 11명) → '18년 355명(여성 60명) → '19년 647명(여성 113명)
- 3·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
  - \* 충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(‘19.3월),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(‘19.4월) 등 26개 사업 실시



---

**안전한 대한민국**

---



## 1.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.

**13시간**

강원 고성산불 진화

**25초**

지진조기경보 시간

**1만 8,438명**

소방관 및 경찰관 총원

###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.

-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강원 고성산불('19.4월) 조기 진화
  - \*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전면 제·개정하여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('18.12월)
  - \* 빠른 소방 비상 대응 3단계 발령으로 소방차 872대, 소방관 3,251명, 헬기 22대 등 소방력 집중
- 지진관측소 108개소 확충, 규모 5.0 이상 지진의 경보시간 단축
  - \* 지진조기경보 목표 시간 : ('16년) 50초 이내 → ('18년) 25초 이내
-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확대 및 내진성능 확보율 향상
  - \* 내진보강 대상 및 내진성능 확보율 : ('16년) 10만 5,448개소, 43.7% → ('18년) 18만 7,950개소, 62.3%

###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·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소방청·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켰습니다.

- 소방·경찰 인력 1만 8,438명 충원('17~'19년)
  - \* 소방관 8,611명, 경찰 8,509명, 해양경찰 1,318명
- 소방인력·장비·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
  - \*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률(6개) 개정 진행 중으로 '20년 상반기 시행 예정
- 화재현장 및 응급상황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청 독립('17.7월)
  - \*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 : ('16년) 1,990명 → ('17년) 2,323명 → ('18년) 3,207명 → ('19.9월) 2,501명
  - \*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소생률 : ('16년) 8.9% → ('17년) 10.5% → ('18년) 10.6% → ('19.9월) 10.7%
-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독립('17.7월)
  - \* 중국어선 불법조업률 : ('16년) 21.2% → ('17년) 15.5% → ('18년) 13.3% → ('19.10월) 10.1%
  - \* 해양사고 사망자 수 : ('16년) 229명 → ('17년) 229명 → ('18년) 216명 → ('19.9월) 162명

### 재난관리체계의 내실을 강화했습니다.

-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시·군·구 단위에서 읍·면·동 단위로 세분화('18.5월)
-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44% 상향(전파 900→1,300만원, 반파 450→650만원, '18.7월)
- 지진·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 간소화(기상청·행안부 → 기상청 직접 발송, '18.6월)

## 2. 전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**0명**

메르스 발생 시 사망자 수  
(‘18년)

**3건**

구제역 발생건수  
(‘19년)

**0건**

AI 발생건수  
(‘18/‘19년)

###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메르스에 신속 대처하였습니다.

- ‘18.9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총력 대응으로 추가 확산 없이 38일 만에 상황 종료

\* 메르스 상황 비교(‘15년↔‘18년) : 환자수 186명↔1명, 사망자수 38명↔0명, 격리자수 16,693명↔21명



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사망자 수

###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.

- (구제역) ‘19.1월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총력 대응으로 역대 최단기간(4일) 방역조치

\* (‘15년) 185건 → (‘16년) 21건 → (‘17년) 9건 → (‘18년) 2건 → (‘19년) 3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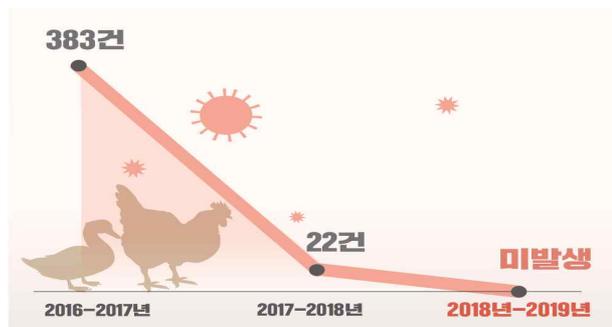
- (AI) 방역취약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‘18.3월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

\* 오리 사육제한(203개 농장), 철새 AI 항원검출지역(41개 시군구) 소독 강화, 거점소독시설 사전 운영(190개소), 중앙점검반 방역점검(5,880개소) 추진 등

\* (‘16/‘17년 동절기) 383건 → (‘17/‘18년 동절기) 22건 → (‘18.3월~현재) 0건



구제역 발생 건수



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건수

###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,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.

- 경기 파주에서 최초발생(‘19.9월) 되었으나,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 수매·살처분, 중점 관리·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이외 추가확산 저지

\* 중점관리지역 : 경기, 강원, 인천 / 완충지역 : 고양, 포천, 양주, 동두천, 파주

### 3. 생활화학제품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.

**2,791명**

가습기살균제 피해  
인정자 수('19.9월)

**86.1%**

HACCP 적용제품  
생산비율('19.9월)

**643건**

국민청원 안전검사제  
검사 건수('18.4~'19.9월)

#### 화학안전사고 피해구제와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 인정자 수 확대
  - \* '16년 1개(구제급여 : 폐질환) → '19년 10개(구제급여 : 태아피해, 폐질환, 천식, 독성간염, 특별구제계정 : 폐질환, 성인·아동간질성폐질환, 기관지확장증, 폐렴, 천식)
  - \* 피해 인정자 '16년 258명 → '19.9월 2,791명, 피해 지원금액 '16년 41억원 → '19.10월 489억원
-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자 대상 피해구제 시범사업 실시('17.12월~)
  - \* 국가 구제급여 先 지급, 後 구상, 신청자 228명 중 89명 지원
-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
  - \* 「화학제품안전법」, 「화학물질등록평가법」 시행('19.1월)
- 안전한 화학물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 도입
  - \* 이미 유통 중인 화학물질 사전 신고(772개 기업이 827종 물질 신고, '19.7월)
-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속 확대
  - \* '16년 15개 품목 → '19.9월 35개 품목

####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있습니다.

-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 WTO 분쟁 승소
  - \*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('19.4월)
- 국민요청에 따라 검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확산
  - \* 청원검사시스템 53만명 접속, 노니제품·다이어트 식초 등 검사('18.4~'19.9월, 643건)
-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전면 시행('19.1월)
  - \* '16년 견과종실류, 열대과일류 → '19년 모든 농산물
-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(굴비·생굴, '18.12~'21.12월)
-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('19.2월)
- 식품안전관리인증 제도(HACCP) 강화
  - \* HACCP 의무적용 적용제품 생산 증가('16년 68.7% → '19.9월 86.1%), 인증업체 전면 불시평가 도입('19.2월)

#### 4.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

12% ↓

교통사고 사망자  
(‘16년 대비 ‘18년)

29년

29년 만에  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전부개정

3명

타워크레인 사망자(‘19.9월)

####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였습니다.

- 「도로교통법」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·기준 강화
  - \* 음주운전 처벌(‘18.12월) : 사망사고 발생시, 1년 이상 →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
  - \* 음주운전 기준(‘19.6월) : 면허정지 0.05% → 0.03% 이상 / 면허취소 0.10% → 0.08% 이상
  - \* 음주운전 사망자 수 : (‘16년) 481명 → (‘17년) 439명 → (‘18년) 346명 → (‘19.9월) 172명
-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(60→50km/h),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,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(60개소)
  - \* 교통사고 사망자 수 : (‘16년) 4,292명 → (‘17년) 4,185명 → (‘18년) 3,781명 → (‘19.9월) 2,402명

####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했습니다.

- 29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전부개정(‘19.1월)
  - \* 위험의 외주화 방지, 원청의 안전·보건책임 강화, 사업주 처벌 강화,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 등
- 예방중심 집중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 감소
  - \* 건설업 사망자 수 : (‘16년) 499명 → (‘17년) 506명 → (‘18년) 485명 → (‘19.9월) 336명
  - \* 타워크레인 사망자 수 : (‘16년) 10명 → (‘17년) 17명 → (‘18년) 0명 → (‘19.9월) 3명

#### 자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-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,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(‘20년)
- 지역사회 생명지킴이\*·일차 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치료 연계 강화
  - \* 독거노인 생활 관리자, 방문 간호사 등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(‘18.1~‘19.7월 167만명)
-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「자살예방법」 개정(‘18.12월, ‘19.1월)
  - \* 온라인 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규정(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) 신설,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 제공, 자살예방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 신설 등 포함

## 5. 재외국민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**365일  
24시간**

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

**10건  
12,000명 지원**

신속대응팀 파견

**567만명**

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 
방문자 수('19.9월 누적)

### 재외국민보호의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365일, 24시간 전담 직원이 해외 사건·사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
- 피해자 및 가족 지원, 부처 간 협업 및 상황 전파,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등
- \* 리비아에서 피랍되어 315일 만에 석방된 우리 국민의 자녀가 정부에 감사 편지('19.5월)

###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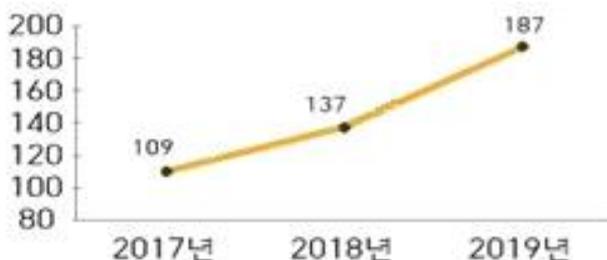
- 외교부 본부 또는 인근 공관 직원을 현지에 급파하여 영사조력 제공 등 현장대응
- \* 최근 주요 대응 성과 : ▲훗카이도 지진 시 신속 귀국 지원('18.9월) ▲사이판 태풍 시 신속 귀국 지원('18.10월) ▲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시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선체 인양('19.5-7월) ▲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 시 고립 선원 전원 구조('19.9월) 등 10건 총 1만 2,000명 지원

###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영사조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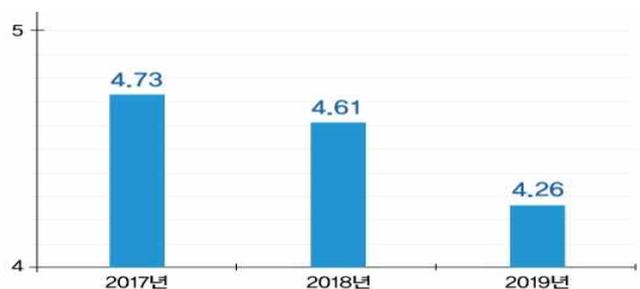
- 범죄 등 6개 분야 영사조력,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 의무 구체화

### 해외안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사건·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.

-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가·지역별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
-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제도 및 여행금지제도 운영



연도별(1~8월) 홈페이지 방문자 수(만명)



해외출국자 만명 당 피해 사건·사고 수(건)

## 6.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.

일 35 $\mu\text{g}/\text{m}^3$   
연 15 $\mu\text{g}/\text{m}^3$

선진국 수준  
일평균, 연평균 환경기준 강화

57만대

저공해차 보급  
(‘19.8월 누적)

25%

발전·산업부문 미세먼지  
배출량 감축률(‘18년 대비)

###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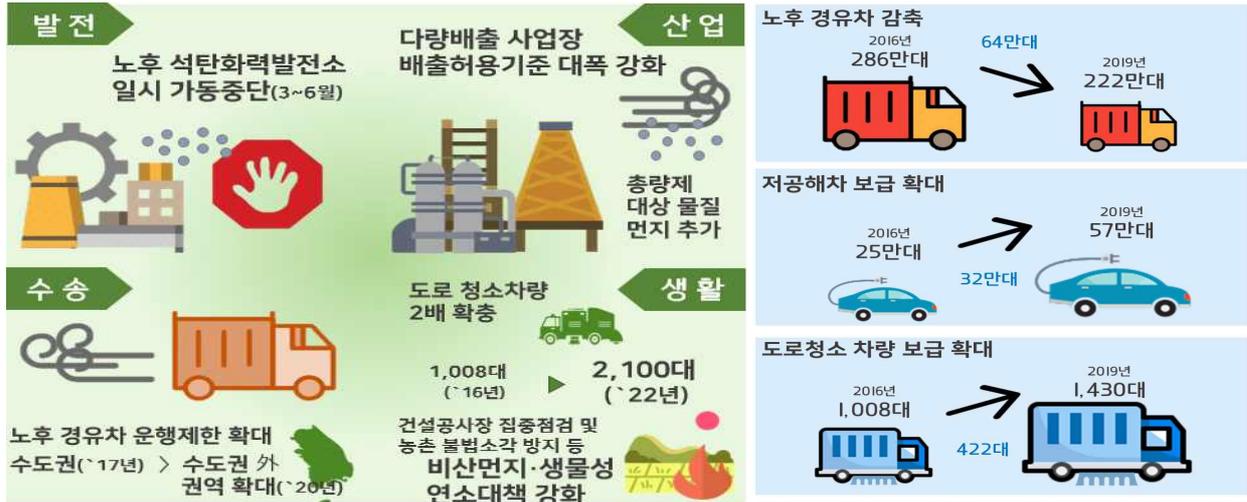
- 미세먼지(PM2.5) 환경기준을 선진국(미국, 일본) 수준으로 강화(‘18.3월)
  - \* 일평균 50 $\mu\text{g}/\text{m}^3 \rightarrow 35\mu\text{g}/\text{m}^3$ , 연평균 25 $\mu\text{g}/\text{m}^3 \rightarrow 15\mu\text{g}/\text{m}^3$
-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 포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8법 제·개정(‘19.3~4월)
  - \* 제정 :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, 「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
  - 개정 : 「재난 및 안전 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, 「학교보건법」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
- 정부·민간합동 국가기후환경회의(대통령 직속, ‘19.4월),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(총리실, ‘19.2월) 설치
-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실시(‘19.2월~)
  - \* 차량 2부제, 사업장·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(전국 미세먼지 일평균 배출량(888톤)의 약 10.7%(95톤) 저감 효과)

###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(발전)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봄철(3월~6월) 가동중단(‘17.5월~), 4기 폐쇄(‘19.9월)
    - \*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(‘16년) 3.1만톤  $\rightarrow$  (‘18년) 2.3만톤
  - (산업)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,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
    - \*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(‘18년) 5.2만톤  $\rightarrow$  (‘19년) 3.8만톤
    - \* 전기집진시설, 흡수흡착시설, 여과집진시설 등 설치 지원(‘19년, 1,178억원)
  - (수송) 노후 경유차 폐차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
    - \*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노후 경유차 15% 감소 (‘16년) 286만대  $\rightarrow$  (‘19.9월) 222만대
    - \* 저공해차 보급 (‘16년) 25만대  $\rightarrow$  (‘19.9월) 57만대
- ※ 국내 최초 경찰 수소전기버스 현장 배치(‘19.10월), ‘21년부터 모든 경찰버스 수소전기버스 전환 수소전기 순찰차 보급 계획
- \* ‘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를 수소전기버스로 교체할 것’ 공개제안(국무총리, ‘18.10월) 후 추진

- (생활)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

\* 분진흡입차량 등 ('16년) 1,008대 → ('19.9월) 1,430대 보급



###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유치원·어린이집, 초·중·고·특수학교 23만 9,438개실(87.9%) 공기청정기 설치
-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
  - \* ('17년) 206대 → ('18년) 1,781대 → ('19.9월) 1,693대
- 취약계층 집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,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('19.8월)
  - \* 어린이집·유치원, 초등학교, 노인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병원

###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·중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- 한·중 정상회담, 한·중 총리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
  - \* 한중 정상회의('17.12월, '18.11월, '19.6월), 한중 총리회담('19.3월)
- 한·중 환경협력센터 출범(베이징, '18.6월)
  - \* 대기질 개선 협력사업 등 한·중 환경협력계획 세부사업(17개) 확정, 한·중 환경장관회의('19.2월) 등 개최
- 한·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확대('17년 0건 → '19년 6건, 217억원)
  - \* 중국내 제철소, 석탄발전소 등에 한국의 대기오염방지 기술 등 적용
- 한·중 간 대기질 예·경보 정보공유 합의
  - \* 韓 17개 시도 ↔ 中 11개 성시('19.12월 시범운영 개시)



---

# 평화의 한반도

---



## 1.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.

### 3회

역대 최다 남북정상회담

### 최초

남북미 정상회담

### 365일

남북 상시소통체계 확립

###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하였습니다.

- 북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오면서 남북대화 재개
-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및 2018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농구·카누(용선)·조정 등에서 남북단일팀 구성
-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 서울·강릉 공연('18.2.8~11),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('18.4.1~3 '봄이 온다') 등 문화행사 및 개성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사업 재개
- 체육, 문화,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

### 남북정상회담을 세차례 열었습니다.

- 4.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('18.4.27), '판문점선언' 채택
  - \* 남북관계의 전면적·획기적 개선,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해소,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
- 5.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('18.5.26),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 견인
-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('18.9.18~20), '평양공동선언' 및 '9.19 군사분야 합의서' 채택
  - \*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,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

###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을 이뤘습니다.

-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으로 정전 66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('19.6.30)
- 남북미 정상은 행동으로 사실상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를 마련

## **남북간 상시 연락채널을 확립하였습니다.**

-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('18.9.14), 24시간 365일 상시적 소통
-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 포함, 개소 이후 남북간 협의 상시 진행

## **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**

- 2018년 경의선·동해선 철도·도로 현대화 합의에 따른 북측구간 공동조사 시행 및 착공식 개최, 2019년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상호 교환
  - \* 남북철도 분과회담('18.6.26), 남북도로 분과회담('18.6.28),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('18.8.13~20), 동해선 도로 현장 방문('18.12.21~23), 철도 현지 공동조사('18.11.30~12.5, '18.12.8~17), 철도·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('18.12.26)
  - \* 도로 실무접촉('19.1.31), 철도·도로 자료교환('19.1.31, 2.25)
-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남북 산림협력 적극 추진
  - \*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('18.7.4), 금강산 현장방문('18.8.8),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('18.10.22), 개성 왕건 왕릉 일대 공동방제('18.11.29), 북측 산림 관련 시설 현장방문('18.12.11~13, 평양)
- '9.19 군사합의'에 따른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실시('18.11.5~12.9), 남북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및 해도 북측 전달('19.1.30)

## **평화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.**

- '9.19 군사합의' 이행을 토대로 분단의 상징 DMZ 지역에 평화의 길 조성
  - \* 고성('19.4월), 철원('19.6월), 파주('19.8월) 등 3개 구간을 국민에게 개방, '19.10월 기준 1만 5,000여명 방문

## 2. 남북 간에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.

0건

DMZ 일대 접경지역 적대행위

200여구

화살머리고지 발굴유해

2만 2,000여명

JSA 남측지역 방문객 ('19년)

### DMZ일대 모든 적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.

- (지상) 완충지대內(MDL 기준 남북 5km) 포병사격·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전면 중지
  - \* '9·19 군사합의' 체결 이전 비무장지대내 총격·포격도발 총 100여회 발생
- (해상) 완충구역 內(서해: 초도~덕적도, 동해: 통천~속초) 포병·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와 포문 폐쇄 및 포구·포신 덮개 설치
  - \* 과거 연평·대청해전, 천안함 피격사건, 연평도 포격도발 등 다수의 무력충돌 발생
- (공중) 군사분계선(MDL) 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
  - \* 우리측 지역의 정찰·감시활동을 위해 북측이 주기적으로 침투시켰던 北 무인기 운용 全無

### 화살머리고지일대 전사자 유해발굴로 6·25전쟁 상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.

- 남북공동유해발굴지역 지뢰제거 및 남북간 MDL 관통도로 개설
  - \* (지뢰제거) 우리측 (148발), 북측 (3,846발) / (도로개설) 폭 12m, 길이 3km
-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전 준비차원에서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및 기초발굴작업 우선 진행
  - \* ('19.10월 기준) 유해 (200여구 추정, 1,738점)·유품 (50,234점)·지뢰 (410발)·불발탄 (5,133발) 식별

### JSA 완전한 비무장화를 실현했습니다.

- JSA 비무장화 완료 및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기반(CCTV 재배치, 공동근무초소 설치 등) 구축 완료
  - \* JSA내 △지뢰제거, △초소·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, △공동 현장검증 등 조치 완료('18.10월)
- 남북간 관광객 자유왕래 사전준비차원에서 남측지역 견학 우선 재개
  - \* ('19.10월 기준) 448회 내·외국인 JSA 견학 실시 (총 22,000여명)

### DMZ內 GP 시범철수를 통해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.

- DMZ內 남북 각 11개 GP 시범철수(철거) 완료 및 현장공동검증 실시
  - \* UN 등 국제사회에서 군비통제 추진 관련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

### 평화 경제의 바닷길을 열었습니다.

-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로 서해 5도 어장 확장(245km<sup>2</sup>), 조업시간 연장(1시간) 등 조업규제 완화
  - \* 서해 5도 어장 : (기존) 1,614km<sup>2</sup> → (확장) 1,859km<sup>2</sup> (연평어장 90km<sup>2</sup> 확장, D어장 155km<sup>2</sup> 신설)
  - \* 조업시간 : (기존) 주간만 허용 → (연장) 야간 1시간 추가 허용(일출 전, 일몰 후 각 30분씩)

###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-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,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성사 견인
- 굳건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중·일·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

### 3.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

**50조 1,527억원**

'20년 국방예산(안)

**18개월**

병 복무기간(육군 기준, '21년)

**87.8%**

병 봉급 인상률('19년)

#### '국방개혁 2.0'을 통해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.

- 핵·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, 상비병력 감축·병 복무기간 단축 등 첨단전력 기반의 국방인력 정예화 추진

\* '20년 국방예산(안)을 '19년 대비 7.4% 증가한 50조 1,527억원 편성

\*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, 천궁 및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, 3,000톤급 잠수함 진수, F-35A 전투기 도입

\* 병력감축 : ('17년) 61.8만명 → ('22년) 50만명 / 병 복무기간(육군) : ('18년) 21개월 → ('21년) 18개월



-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
\* 공식 대리점 외의 다양한 형태의 중개 활동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중개업 등록 대상 확대,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(일정 규모 방산업체 → 모든 방산업체 및 방위사업 중개업체)

####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
-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'연합방위지침'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간 합의('18.10월)

-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대한 한미 연합검증을 위해 기본운용능력(IOC) 검증 실시('19.8월)

\* 연합검증 단계 : 기본운용능력(IOC) → 완전운용능력(FOC) → 완전임무수행능력(FMC)

-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, 포괄적 핵·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(매년 한·미 공동평가)

####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병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

- 병 봉급을 '22년까지 '17년 최저임금의 50%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, 목돈 마련을 위한 '장병내일준비적금' 출시('18.8월)

\* 병장기준 ('17년) 21만6,000원 → ('19년) 40만5,700원

\* 납입한도 월 40만원, 5% 이상 금리, 비과세 혜택('19.9월 기준 약 26만명 가입)

-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

- 개인 휴대폰 사용,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, 외박지역 제한 폐지



#### 4. 당당한 외교, 흔들림 없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23회  
42개국

정상 해외순방 총 횟수

지구 9바퀴  
374,696km

정상방문 총 거리

24회

주변 4국과의  
정상회담 횟수

####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.

##### 미국

- 남·북·미 정상회담('19.6월, 판문점), 한·미 정상회담('19년 3회, 총 9회)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
- 한·미 FTA 개정, 철강관세 조치 면제 등 국민경제 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

##### 중국

- 한·중 정상회담('19년 1회, 총 5회)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간 신뢰 회복
- 한·중관계 회복으로 한·중 경제공동위 등 경제협의체 재가동,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진전

##### 일본

- 과거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하되, 열린 자세로 대화·협력 추진

##### 러시아

- 19년만의 국빈방문('18.6월), 한·러 정상회담('19년 1회, 총 5회)을 통한 우호·신뢰 강화
- 한·러 서비스·투자 FTA 협상 개시, 소재·장비·부품 공동펀드(10억 달러) 조성, 전력·가스분야 남·북·러 3각 협력체계 구축

#### 투-톱 정상외교를 통해 남북으로 외교 다변화의 길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.

##### 신북방정책

- 러시아와 활발한 고위급 교류, 중앙아 5개국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투-톱 정상급 방문을 통한 신북방정책 외연 확대
- 한-러 간 가스·철도 등 9개 중점분야 협력을 위한 '9개 다리 행동계획' 추진
- 한-러 및 중앙아 5개국간 교역규모는 726억 달러('17.1~'19.9월)

##### 신남방정책

-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인도 국빈방문 등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 가속화
-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-메콩 정상회의('19.11월)를 통한 신남방 모멘텀 구축
- 아세안 및 인도 등 신남방지역과의 교역규모는 4,659억 달러('17.1~'19.8월)

#### 기후변화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외교를 강화하였습니다.

- '19년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'2020 P4G(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) 정상회의' 한국 개최, 녹색기후기금(GCF) 2억 달러 공여 약속
- 한·중 정상회담('19.6월) 등을 계기로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및 한·중 환경협력 강화

## 5.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
**1조 달러**

교역액('19년 전망)

**77%**

전 세계 경제영토  
(GDP기준 FTA 체결)

**10개국**

최초로 아세안 모두  
정상순방

### 국익수호를 위한 통상분쟁에서 연전연승중입니다.

- 일본 후쿠시마수산물\* 상소심 승소('19.4월) 및 일본산 공기압 밸브\*\* 반덤핑 분쟁 승소('19.9월)

\*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유지

\*\* 13개 쟁점 중 10개를 승소하여,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 인정

### FTA 체결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였습니다.

- 한미 FTA 재정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, 한미 교역·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('19.1월, '개정의정서 발효')
- 한-영 FTA('19.10월, 국회비준)로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과의 통상관계 안정성 확보
- 한-이스라엘 FTA('19.8월, 타결)로 일본 수출규제의 불확실성 완화

\* 주요 수입품목인 반도체, 전자, 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기대

- 거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등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

\* 한-중미 5개국 FTA 발효('19.10월), 한-메르코수르 FTA 협상(4회)을 통해 남미 거대 신수출시장 개척 예정

\* ICT 기반의 전자상거래로 미·중·일·독에 이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성장

-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타결('19.11월)로 신남방 지역 수출, 투자 활력 기대

\* 아세안10개국에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 등 16개국 참여, 세계 GDP 1/3에 달하는 거대 다자간 무역협정

### 신흥시장과의 협력 강화로 경제지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

- 아세안 순방 계기 맞춤형 신남방 경제협력 확대

\* 필리핀('17.11월), 베트남('18.3월), 인도('18.7월), 브루나이·말련·캄보디아('19.3월), 방글라데시('19.7월), 태국·미얀마·라오스('19.9월) 정상순방 계기 협력모델 발굴 및 한-필리핀, 한-말레이시아, 한-인도네시아 양자 FTA 협상 진행

- 중앙아 순방 등 신북방정책 가속화

\* 우즈베크·카자흐·투르크('19.4월) 순방 계기 디지털헬스케어, 자동차, 플랜트 등 협력 분야 다각화

\* 한-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추진하여 신북방지역으로의 FTA 네트워크 확충('18.6월, 러시아 순방)

### 원료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하여 EU 수출의 관문을 넓혔습니다.

-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제조품질관리기준(GMP) 서면확인서 면제

\* 수출소요기간 약 4개월 이상 단축, 건별 약 23,000유로 절감 기대

---

# 지역균형발전

---



## 1.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

**총 175조원**

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

**24조원**

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

**5개 지역**

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

### 공간·사람·산업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('19.1월)에 따라 총 175조원을 투입('18~'22년)하여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\*(23개 사업, 24조원 규모 예타면제) 등 추진

\* 지역전략산업 육성(5개), 인프라 확충(7개), 광역 교통·물류망 구축(5개), 삶의 질 제고(6개) 등 4개 유형

###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·확산하였습니다.

-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\* 발표('19.2월) 및 5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\*\*

\* 지자체·중앙정부가 맞춤형 패키지지원(보조금·자금 지원, 세제지원, 국·공유지 임대료 감면, 도로·용수 등 인프라 구축, 정주여건·근로환경 개선 등) 제공

\*\* 광주('19.1월), 밀양('19.6월), 구미('19.7월), 강원('19.8월), 군산('19.10월) 등 5개 지역

### 적극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.

- 군산 등 6개 지역\*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, 재취업·생계 지원, 대체·보완 산업 육성 등 현장 체감형 범정부 합동 지원대책 수립·추진

\* 군산, 거제, 고성·통영, 창원 진해구, 울산 동구, 영암·목포·해남

### 도서관, 체육관 등 생활SOC 확충을 추진합니다.

- 여가활력, 생애돌봄, 안전·안심 등 3대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 투입('20년 예산안 10.4조원 반영)

\* 다수 시설을 한 건물에 모으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('20년 사업으로 광역·기초지자체 대상 289건 선정)

-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,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확충

\* 뉴딜 사업대상지 : ('17년) 68곳 → ('18년) 99곳 → ('19년) 98곳 선정

- 어촌 재생,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'어촌뉴딜 300' 사업 추진

\* ('19년) 70개소 → ('20년) 100개소 이상 → ('22년까지) 300개소

## 2.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.

4,207만원(농가)  
5,184만원(어가)

농어가소득('18년)

50% ↑

쌀값 회복('16년 대비)

1,356가구

40세 미만 귀농가구('18년)

### 농어업인의 소득을 늘렸습니다.

- 농어가소득 전년대비 7.6% 증가(농가 10%, 어가 5.8%)로 역대 최고치 달성

\* 농가소득(만원) : ('15년) 3,721 → ('16년) 3,720 → ('17년) 3,824 → ('18년) 4,207 (10.0% ↑)  
 \* 어가소득(만원) : ('15년) 4,390 → ('16년) 4,710 → ('17년) 4,901 → ('18년) 5,184 (5.8% ↑)

- 직불금, 공적보조 확대 등 이전소득 증가로 농어가소득 안정망 구축

\* 직불금 전년대비 5만원 인상 : 밭농업직불(55만원/ha), 조건불리지역직불(65만원/ha), 조건불리수산직불(65만원/어가)

\*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(품목) : ('17년) 69 → ('18년) 73 → ('19년) 78  
 \*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(%) : ('17년) 54.3 → ('18년) 63.3 → ('19.9월) 62.6



-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·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등 중소농 판로 확충

\*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(개소) : ('16년) 148 → ('17년) 188 → ('18년) 229 → ('19.6월) 248

\* 로컬푸드 직매장, 직거래 장터, 온라인 쇼핑 등 직거래 비중(%) : ('17년) 6.9 → ('18년) 8.2

### 균형 있는 생산조정과 소비촉진을 통해 쌀 수급을 안정시켰습니다.

- 쌀 생산면적 조정(3만3천ha 감축) 등으로 쌀값 회복 및 수급 안정

\* 쌀값 추세(원/80kg) : ('13년) 173,372 → ('16년) 128,660  
 → ('17년) 155,579 → ('18년) 193,376

\* 쌀 생산조정제로 시장 격리효과(17만 7천톤) 및 시장 격리비용(보관료 등 4,779억원) 절감



- 쌀 해외원조(5.1만톤), 소비촉진으로 정부관리양곡 재고 21% 감소

\* 정부양곡 재고량(만톤) : ('19.1월) 150 → ('19.5월) 118 (32만톤 ↓)

### 젊은층의 귀농이 늘어났습니다.

- 귀농 지원 강화 및 농업·농촌 인식개선 등으로 젊은층의 귀농 증가

\* 40세 미만 귀농가구수(가구) : ('13년) 1,164 → ('17년) 1,325 → ('18년) 1,356

\* 초기 생활안정자금(월 최대 100만원), 창업자금, 농지임대, 영농교육 등 지원

### 3. 지방분권, 가속화하겠습니다.

**3.3조원**

국세-지방세 전환

**928억원**

국민참여예산제 도입

**214개**

주민자치회 운영 지자체

####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, 지방재정을 3.3조원 확충하였습니다.

-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'20년까지 총 국세 8.5조원을 지방에 이양

\* '19년 3.3조원 이양 완료, '20년 8.5조원에 대한 지방배분안 마련(지방소비세율 11% → 15% → 21%)



#### 재정운영에 국민·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(중앙부처) 국민이 예산의 제안, 심사,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

\* 생활밀착형·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심 38개 사업 928억원 '19년 예산 반영

- (지방자치단체)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('18.3월)

\* 주민참여예산제 규모 : ('17년) 1.3만개 사업, 1.09조원 → ('19년) 1.9만개 사업, 1.38조원

#### 플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.

-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214개('19.9월)

\*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총회 개최, 마을계획 수립, 수탁 사무 등 이행

- 주민참여조례시스템 구축 및 주민참여조례 온라인전자서명제도 도입('18.1월)

\* 주민참여조례제정 신청 현황 : ('16년) 4건 → ('17년) 16건 → ('18년) 3건 → ('19.10월) 13건



---

# 민주주의

---



민주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29계단 ↑

언론자유지수

7계단 ↑

부패인식지수

7계단 ↑

OECD 정부신뢰도 순위

**정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**

-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, 검·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 중  
\* 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('19.4월) → 본회의 부의 예정('19.12월)
-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금지를 위한 입법 추진('17.11월)
- 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로 개편('18.9월)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('18.12월)

**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.**

- 심야조사 제한, 피의사실 외부공표 금지, 공개소환·포토라인 폐지('19.10월)  
\* 피의자 조사시 수갑·포승 착용 원칙적 금지('18.11월)
-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참여 확대('18.3월), 자기변호노트 도입('19.10월)

**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했습니다.**

-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4년 연속 상승, 180개국 중 41위로 참여정부 수준 회복  
\* ('16년) 70위 → ('17년) 63위 → ('18년) 43위 → ('19년) 41위
- 아시아 국가 중 최고순위 (일본 67위, 중국 177위)

**부정부패가 줄어들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.**

- 범정부 '반부패정책협의회'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 
\* (교육) 대학 블라인드면접 확대,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 
(탈세) 고액체납자 금융조회범위 확대  
(채용)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, 피해자 구제 및 책임자 처벌
- 부패인식지수(CPI) 역대 최고점수 달성, 순위 7계단 상승  
\* ('16년) 52위 → ('17년) 51위 → ('18년) 45위
- OECD 정부신뢰도 순위 7계단 상승  
\* ('17년) 32위 → ('18년) 25위

**민주화를 위한 시민들의 공헌을 더 높이 기렸습니다.**

- 민주시민운동 정부기념일 지정(부마민주항쟁, 대구 2.28 민주운동, 대전 3.8 민주여거)
- 광주민주항쟁 진상규명 추진







대한민국정부